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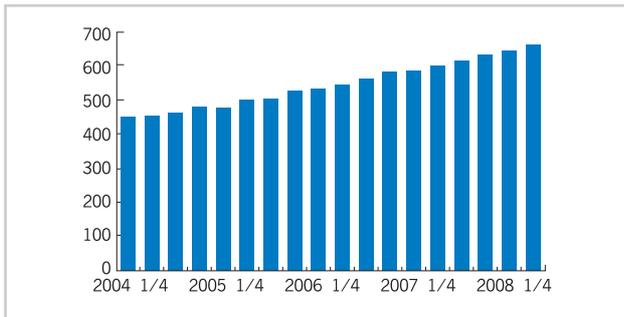
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이 소득계층별 소비활동에 미치는 영향

申 龍 相 (研究委員, 3705-6329)

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국내가계는 1년 전에 비해 약 6.2조원의 추가 이자부담과 연간 2.1% 정도의 실질 민간소비 감소를 감내해야 하며, 가계부실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 특히 저소득층의 충격이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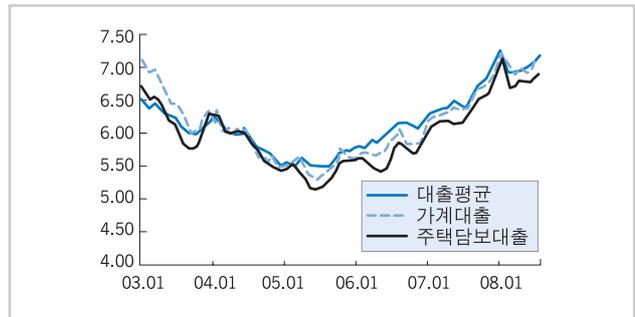
-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위축 및 가계부실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 -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현재 판매신용을 제외한 금융권 가계대출은 622.9조원으로 2007년 6월말 564.7조원에 비해 1년만에 58.2조원(10.3%)이 증가함.
 -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추이를 보면 2008년 7월말 현재 은행권이 7.12%, 비은행권은 은행권보다 1.0%p 정도 높은 8.10% 내외에서 형성되면서 금융권 전체로는 7.49%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. (2007.7월 기준 6.68%보다 0.81%p 상승)

〈그림 1〉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추이 (단위 : 조 원)

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 2〉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추이 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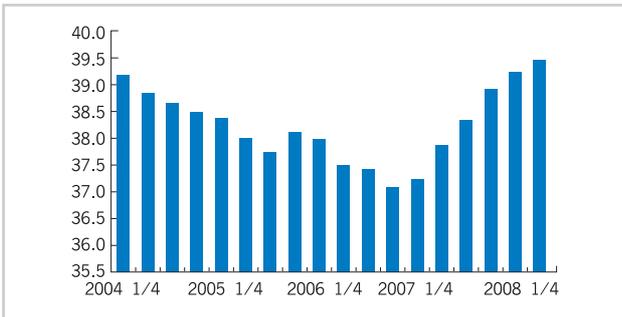


- 최근 가계부채의 추이를 보면 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뿐만 아니라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의 이자부담도 이에 비례하여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 - * 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 추이 : '07.6월말 37.1% → '07.12월말 38.9% → '08.6월말 39.5%
 - 이에 따라 2008년 한 해 동안에 가계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전체 규모는 46.7조원 정도로 2004년의 29.7조원보다 17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.

- 한편 본원이 시행한 대출금리 상승이 소득계층별 소비행태 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 상승은 소득계층 전반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.
 -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 1%p 상승은 고소득층(상위 20% 소득계층)의 소비를 2.44%p, 중간소득층(중위 60% 소득계층) 및 저소득층(하위 20% 소득계층)의 소비를 각각 3.41%p 및 5.01%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됨.
- 이와 같은 분석결과와 과거 1년간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추가 상승분(0.81%p) 및 가계대출 증가분을 고려한다면, 국내 가계는 1년 전보다 약 6.2조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고 2.1% 정도의 추가적인 실질 민간소비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 - 최근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이는 6% 정도의 명목소비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가계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소비 감소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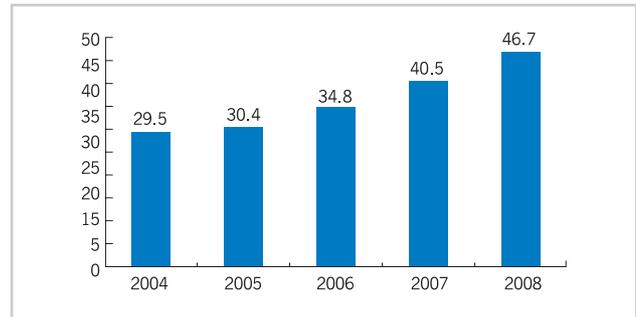
〈그림 3〉 제2금융권¹⁾ 가계부채비중 추이

(단위 : %)



〈그림 4〉 가계의 이자부담 추정액 추이

(단위 : 조 원)



주 : 1) 제2금융권이란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에서 은행을 제외
 자료 : 한국은행, 가계의 이자부담 추이는 한국금융연구원 추정치

-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출금리 변화에 대한 소비민감도가 크게 나타난 것은 적자율*과 부채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자부담에 따른 처분가능소득 감소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.
 - * 소득계층별 적자율(08.2/4분기 기준) : 고소득층 36.5%, 중간소득층 18.5%, 저소득층 △38.8%
 - 적자율이란 「(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) / 처분가능소득」 비율이며 적자율은 마이너스 (-) 적자율을 의미

- 따라서 향후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문의 상환능력 축소 및 소비여력 감소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 - 특히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소득 중하위계층에 대해 향후 감세나 재정지출 확대 시 이들 계층의 소비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 - 또한 가계부실 위험에 대비하여 대출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 **KIF**